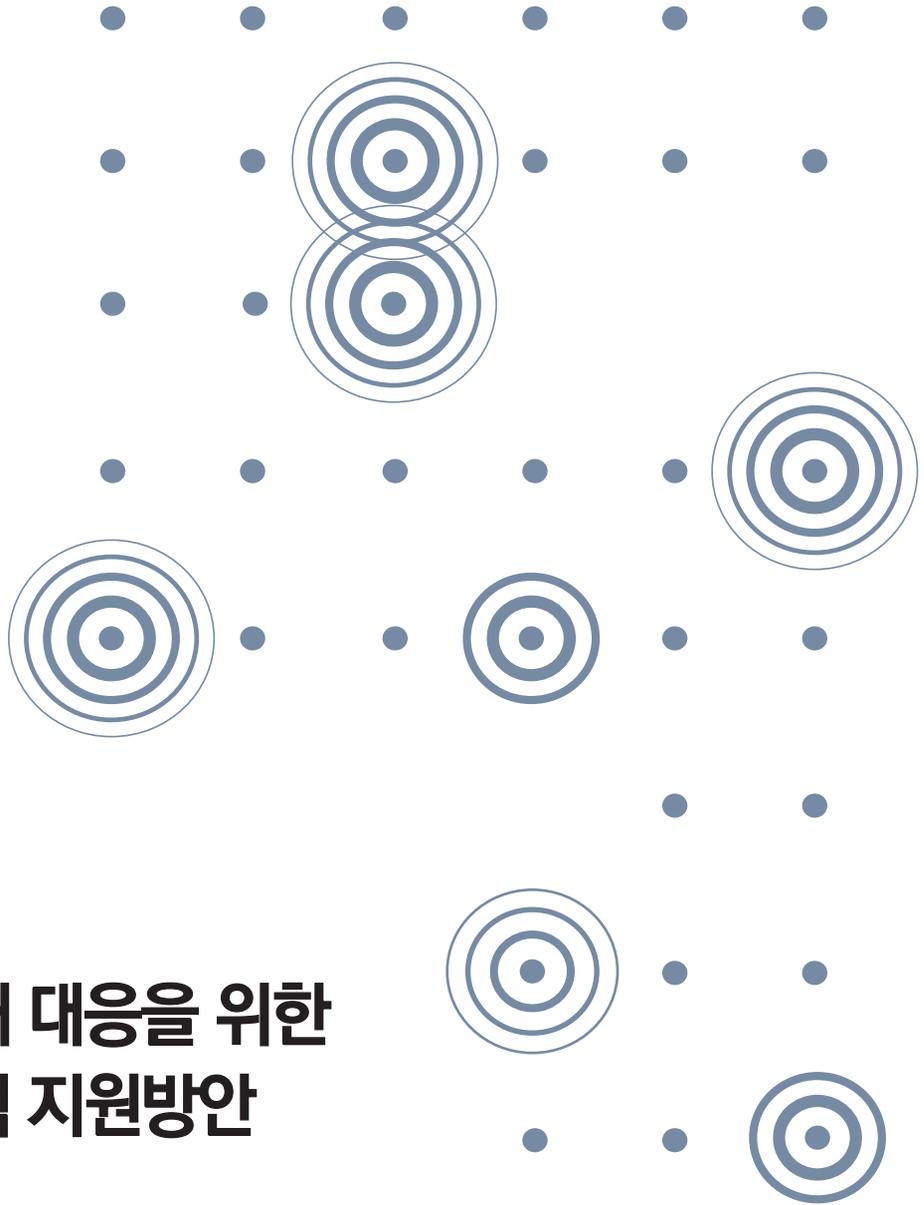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417호 2025. 4. 7



—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

김경민

연구위원

채종길

연구위원

한인숙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417호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

발행인 오 균
편집인 이신해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5년 4월 7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4. 7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17호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

김경민 연구위원
02-2144-2953
justin@si.re.kr

채종길 연구위원
02-2144-2906
chaie76@si.re.kr

한인숙 연구원
02-2144-2961
hanis@si.re.kr

요약	3
I.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4
II. 서울시 민간사업장 업종별 재해발생 특성 분석	8
III. 정책 제언	15

요약

많은 논란 속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22년 1월 27일 시행)이 ’24년 1월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재해 민간분야’의 경우, 자원과 정보의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의 확대 시행으로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된 5~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업종별, 종사자 수별 등 재해발생 가능 민간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리포트는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서울시 민간 사업장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은 99%, 중대재해 발생률 최고, 대응은 가장 미흡

현재 서울시 전체 민간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의 확대 적용을 받는 ‘5~50인 미만 사업장’은 160,020개로 13.6%에 해당한다. 또한,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43%로 가장 높고, 위험성 평가 인지 및 이행률은 가장 낮아, 재해 발생률 대비 대응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 사고발생 빈도, 위험도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비책의 한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률’뿐만 아니라 ‘대응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요 업종, 중대재해 발생 취약 업종,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유형 및 빈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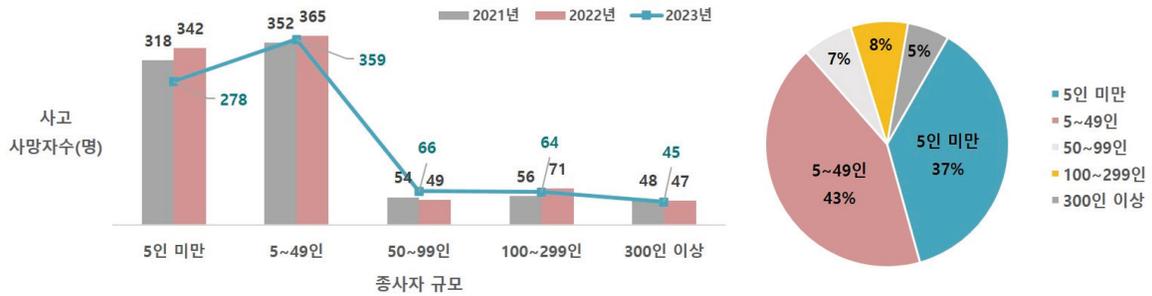
서울시 민간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자본·정보 등에서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대응을 위해 ‘간편 공통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서울시 지원사업을 우선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계하여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의 중복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1.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1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소규모 사업장은 대응 난항

중대재해처벌법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사고사망자 발생 취약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었고,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인력과 자금,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하였으나 국회에서 개정안 불발로 즉시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연도별 및 종사자 규모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
 - 중대재해 발생에 가장 취약한 사업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발생 건수

업무상 사고사망자 평균 발생 비율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2023년 산업재해 분석」(2024)

[그림 1] 사고사망자 발생 건수 및 비율

- 법 확대 시행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 사업장 중 추가 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13.6%를 차지
 - 2022년 기준 서울시 총 사업체 수¹⁾는 1,180,025개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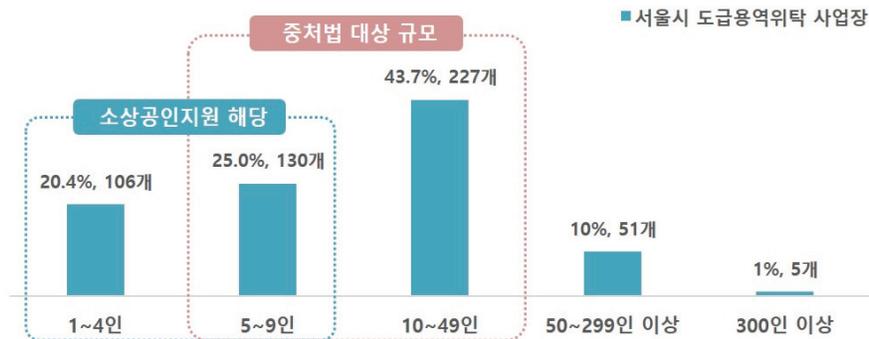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2023),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표 1]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규모	2021년		2022년		증감률
	사업체(개)	구성비(%)	사업체(개)	구성비(%)	
1~4인	1,012,310	85.2	1,007,238	85.36	-0.5
5~9인	100,475	8.46	97,156	8.23	-3.3
10~49인	62,624	5.27	62,864	5.33	0.38
50~99인	7,132	0.6	7,034	0.6	-1.37
100~299인	3,986	0.34	4,167	0.35	4.54
300인 이상	1,564	0.13	1,566	0.13	0.13
합계	1,188,091	100	1,180,025	100	-0.68

자료: 서울특별시(2023),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또한,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89.1%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점검 필수
 - 서울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진행²⁾,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
 - 서울시 발주 사업의 수급 사업장 총 519개 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357개로, 68.7%에 해당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현황」(2023.5월)

[그림 2]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구성비 및 개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정기적 위험성 평가가 핵심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가능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표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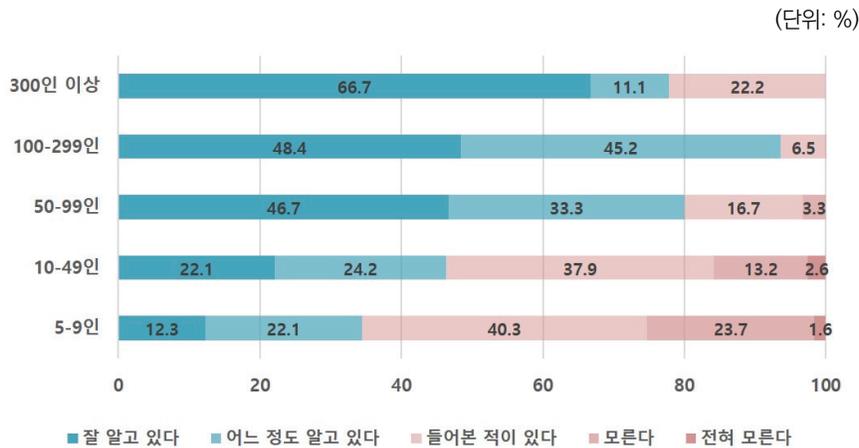
법(영)	안전보건확보의무 세부내용	의무 대상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조직 마련 유해, 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법 위반 사항 점검 및 개선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인정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향후 재해 발생 시에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

서울시 소재 전체 사업장 중 5~5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질적 대응이 가장 미흡

-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위험성 평가 인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5~9인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인지율은 34.4%로 가장 낮음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3] 종사자 규모별 위험성 평가 인지율

- ‘5~49인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미이행률은 37.0%, 50인 이상 사업장은 13.0%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질적인 법 대응은 가장 미흡

3) 응답 중 ‘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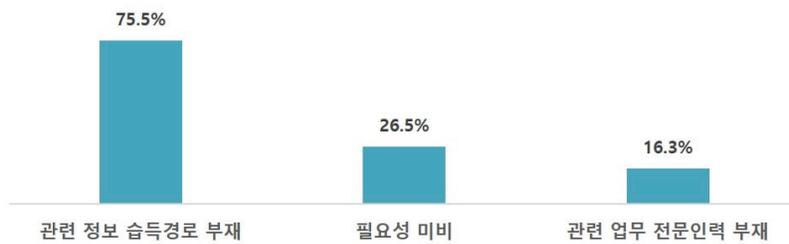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4] 종사자 규모별 위험성 평가 이행률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정보 습득경로 부재’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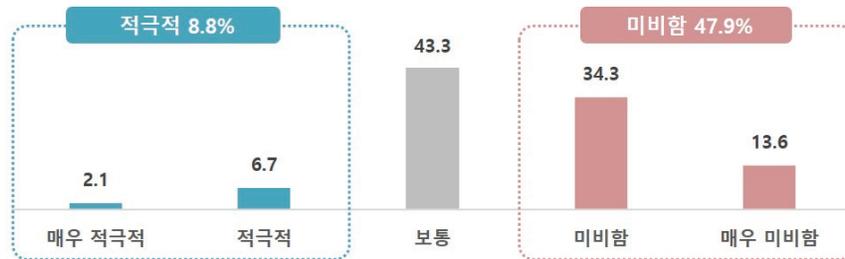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미인지 이유(복수응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은 다소 부족, 소규모 사업장은 대응 준비 부족

-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위해 2년 동안 유예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정책 홍보와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
 - 서울시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미비하다’는 응답이 47.9%로 나타나 기업들이 지원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6]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지원 정도

II. 서울시 민간사업장 업종별 재해발생 특성 분석

I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비책, 특성 분석 먼저

업종 특성, 종사자 규모별 등 구체적인 고려 없는 대비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으로 분류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발생 건수는 타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
 - 추세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보완이 필요한 업종으로 판단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2023년 산업재해 분석」(2024)

[그림 7] 업종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발생 건수

- 현재 업종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업종에 획일적인 법 적용을 받고, 사고 유형, 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상황
 - 예를 들어, 일부 사무직 중심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낮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법상에서도 안전보건확보의무라는 모호한 규정만 존재
 - 업종, 규모별 사고 유형과 빈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 마련 필요

서울시 소재 분포 상위 업종과 서울시 직발주 사업장 고려 중요

- 업종, 규모별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주요 업종 조사
 - 서울시 소재 기업의 업종은 총 19개⁴⁾, 구성비가 높은 상위 3가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7.5%)’, ‘숙박 및 음식점업(11.8%)’, ‘운수 및 창고업(10.0%)’
 -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으로 분류한 ‘제조업(6.4%)’, ‘건설업(5.7%)’은 서울시 소재 구성비에서 각각 6위, 8위로 확인

4)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활용, 업종의 산업대분류 개수로 비중 계산

[표 3]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 현황

산업대분류	2021년		2022년	
	사업체(개)	구성비(%)	사업체(개)	구성비(%)
합 계	1,188,091	100	1,180,025	100
A. 농업, 임업 및 어업	154	0.013	141	0.012
B. 광업	25	0.002	26	0.002
C. 제조업	76,870	6.47	75,641	6.41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83	0.06	653	0.06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20	0.06	764	0.06
F. 건설업	67,382	5.67	66,868	5.67
G. 도매 및 소매업	335,817	28.27	324,613	27.51
H. 운수 및 창고업	110,339	9.29	118,073	10.01
I. 숙박 및 음식점업	141,679	11.02	139,173	11.79
J. 정보통신업	57,615	4.85	59,783	5.07
K. 금융 및 보험업	23,328	1.96	24,693	2.09
L. 부동산업	72,984	6.14	72,058	6.1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2,402	6.94	81,166	6.8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460	2.65	29,595	2.5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03	0.11	1,299	0.11
P. 교육 서비스업	46,855	3.94	47,002	3.9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866	2.68	32,319	2.7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722	2.42	28,242	2.3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7,887	6.56	77,916	6.6

자료: 서울특별시(2023),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서울시 분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의 수급 사업장을 업무 특성에 맞도록 분류하여, 대분류 11개, 소분류 31개 업종으로 재분류 수행⁵⁾ 후 주요 업종 도출
 - 재분류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업종 중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2가지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서울시 주요 업종과 산업재해 취약 업종을 포함한 총 7개 업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유형과 빈도,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분석 수행
 - 종사자 규모에 따른 재해 유형, 발생 빈도,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하여 종사자 규모별 서울시 소재 기업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 할당으로 표본 설정

5) 수행 업무 특성을 확인하고, 업무와 연관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소분류에 맞도록 재분류함

[표 4]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사업장 재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기타거주복지서비스업
		기타비거주복지서비스업
		보육시설운영업
보건업	병원	
기타보건업	그 외 기타보건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재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익업
	전문서비스업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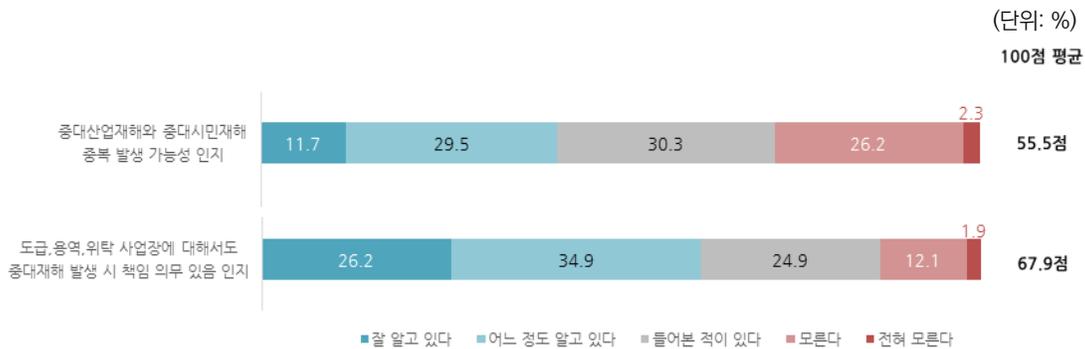
[표 5] 조사 표본

업종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수(개)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합계
전체	253	190	30	31	18	522
1. 도매 및 소매업	48	28	6	6	2	90
2. 숙박 및 음식점업	30	16	1	2	1	50
3. 운수 및 창고업	27	30	5	8	2	72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20	6	1	-	54
5. 제조업	51	32	1	3	1	88
6. 건설업	42	32	5	3	1	83
7. 사업 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8	32	6	8	11	85

I 업종, 종사자 규모, 재해유형에서 뚜렷한 차이, 차별화 대응방안 필요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 일부 사업장에서는 중복 발생도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명시
 -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재해를 의미
 -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 등)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
- 일부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업종 특성에 따라 중복 발생 가능, 이에 대한 고려와 대비책 필요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외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 시설들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가 중복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중복 발생 업종 : 운수업(버스, 트럭), 제조업(화학제품, 의약품 등),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식료품 제조·가공업(급식업체, 음식점 등), 숙박업 등
 - 실태조사 결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중복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인지율은 41.2%로, 나머지 58.8%의 사업장은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⁶⁾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인지도

6) ‘들어본 적이 있다+모른다+전혀 모른다’를 합한 응답 58.8%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 대응 현황 분석 결과 종사자 규모에서 확연한 인식 차이 존재

-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응이 미비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다시 묻자, 종사자 규모에서 뚜렷한 응답 차이 확인
 - ‘5~49인’ 사업장에서 재해유형에 상관없이 ‘대응 필요성이 미비’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다’라는 응답이 그다음으로 높았음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 습득경로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이 미비하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종사자 규모에 따른 재해 예방에서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맞는 차별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표 6] 중대시민-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이 미비한 이유(복수응답)

(Base: ‘그렇지 않다’ 응답자, 단위: 개, %)

구분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수					
		전체	5-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대산업재해	사례수	(70)	(43)	(24)	(2)	(1)	-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필요성 미비	52.9	62.8	37.5	50.0	-	-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름	35.7	32.6	37.5	50.0	100.0	-
	대응할 여력(예산, 인력 등)이 없음	34.3	25.6	50.0	50.1	-	-
중대시민재해	사례수	(108)	(58)	(38)	(6)	(4)	(2)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 필요성 미비	53.7	63.8	44.7	-	75.0	50.0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름	43.5	37.9	50.0	83.3	25.0	-
	대응할 여력(예산, 인력 등)이 없음	18.5	12.1	26.3	33.3	25.0	-
	기타	1.9	1.7	-	-	-	50.0

주: 사례수 n<30일 경우,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주의 필요

중대시민재해·산업재해 발생 유형 분석, 업종별 재해 유형에서 차이 뚜렷

- 사망자 또는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에서 뚜렷한 차이 확인
 - 서울시 주요 업종 중 하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은 ‘화재 폭발(80.0%)’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전기 가스(58.0%)’의 응답을 보여, 이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업종 특성으로 판단
 -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교통시설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도로 교통 재난’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인 ‘건설업’은 ‘추락 낙상(50.6%)’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는 고소작업이 많은 업무 특징으로 인한 응답으로 판단

[표 기] 서울시 시민산업재해 중복 해당 사업장 및 규모별 사고빈도 및 유형

구분		시설물 재난	화재 폭발	승강기	전기 가스	추락 낙상	협착 끼임 간힘	도로 교통 재난	식품
업종	도매 및 소매업	33.3	34.4	28.9	27.8	15.6	16.7	18.9	8.9
	숙박 및 음식점업	48.0	80.0	42.0	58.0	24.0	14.0	4.0	40.0
	운수 및 창고업	20.8	30.6	31.9	13.9	12.5	6.9	38.9	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6	11.1	13.0	11.1	20.4	11.1	9.3	3.7
	제조업	31.8	30.7	33.0	21.6	8.0	14.8	12.5	14.8
	건설업	55.4	26.5	19.3	24.1	50.6	26.5	16.9	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6.5	22.4	37.6	20.0	24.7	21.2	9.4	5.9
규모	5~9인	40.3	33.2	26.9	27.3	22.1	13.8	15.0	10.3
	10~49인	34.2	32.6	33.2	22.1	21.6	16.8	17.4	7.4
	50~99인	40.0	23.3	33.3	23.3	23.3	30.0	20.0	6.7
	100~299인	38.7	29.0	25.8	12.9	22.6	19.4	25.8	12.9
	300인 이상	33.3	27.8	27.8	22.2	27.8	22.2	0	16.7

주: 빨간색 텍스트는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값, 파란색 텍스트는 사고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값

- 이처럼, 업종별로 재해발생 유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재해 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적절한 재해예방 계획 수립 필요성 확인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비교적 대비 잘 되어 있어

- 서울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체보다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준비 정도가 높아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해당되는 상시근로자 수 '5~50인 미만의 사업장'이 68.7%를 차지하고,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규모에 해당하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주기적인 교육, 점검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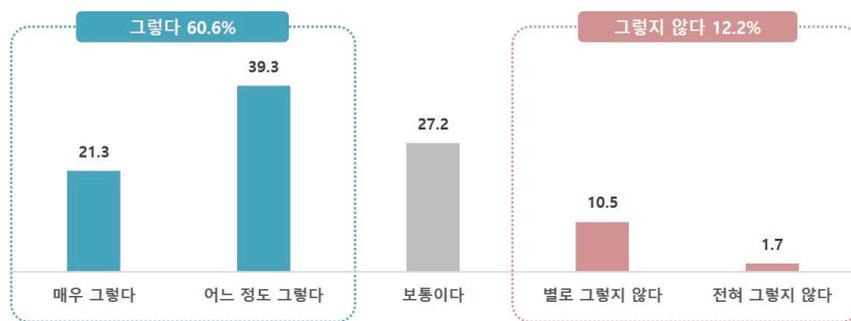
업종별 필요한 지원방안은 매뉴얼 작성 보급이 최우선,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

- 업종별 지원방안에 대해 가장 응답이 높은 상위 2가지 지원방안을 살펴본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하고 모두 1안에서 '매뉴얼 작성보급'을 선택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안으로 '매뉴얼 작성보급'을 선택

[표 8] 업종별 지원정책 선호도

업종	필요 서울시 지원방안	
	1안	2안
도매 및 소매업	매뉴얼 작성보급	안전설비 투자 비용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설비 투자비용	매뉴얼 작성보급
운수 및 창고업	매뉴얼 작성보급	안전설비 투자 비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매뉴얼 작성보급	업종특화 현장 지도
제조업	매뉴얼 작성보급	안전설비 투자 비용/ 업종 특화 현장 지도
건설업	매뉴얼 작성보급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0.6%로 나타나



자료: 자체 실태조사 결과(2024)

[그림 9]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 여부

III. 정책 제언

I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 마련

- 1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기본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온라인 구독서비스 우선 제공을 통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장려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매뉴얼(위험성 평가 등) 및 온라인 교육 제공
 - 정부 및 서울시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 제공
- 50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발생 취약 업종을 분석하여 업종별, 재해 유형을 고려한 지원
 - 일반 사업장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간편 매뉴얼 제공
 - 시민·산업재해 중복 발생 사업장은 맞춤형 재해 예방 컨설팅 우선 제공
 -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은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무 사항 이행 관리, PQ평가를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
- 50인 이상 사업장은 국제표준과 연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지원
 -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1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기본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간편 매뉴얼 보급'과 '온라인 서비스' 지원 검토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	일반 사업장	- 법적 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시민+산업재해 중복 발생 사업장	- 중복 발생 인지율이 낮고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에 정부 및 서울시 사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관리 추진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 강화	-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계, 경영 리스크 선제적 관리	

I 1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마련

기본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간편 매뉴얼 보급'과 '온라인 서비스' 지원 검토

- 서울시의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1,180,025곳 중 약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일반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표가 직접 안전점검 업무를 이행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재해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매우 열악한 상황
-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매뉴얼 작성 보급(54%)',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61%)'하다고 응답
 -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
- 현재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지만, 민간에서는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중이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무료 활용을 통해 기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대응 노하우 확보, 대응 절차 이해 등 다양한 이점 존재
 -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대상 우선순위, 범위, 무료 사용 기간 등 협의 필요
- 정부 및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장 내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I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법적 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간편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작성이 가장 어렵고 난해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보고서'를 해당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을 제시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고용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누구나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

7) 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매뉴얼을 함께 참고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해야 함

간편 공통매뉴얼 예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작업시작 전 회의(TBM)결과

		담당	팀장	대표					
		결재							
제목	지게차 작업 시 작업 안전수칙 준수								
TBM 일시	2024년 07월 05일 09:10 ~ 09:30	작업공정	수소 공급 공정						
TBM 장소	No 5. 하역장	TBM 리더	○○○(경영지원팀/대표이사)						
작업내용									
1. 수소 탱크 이동 2. 배관 설비 정리/ 선적/ 하차 등									
TBM 회의자료	1. 지게차 안전 수칙 2. 지게차 이동 경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유해위험요인	1. 지게차 충돌 사고								
감소대책	1. 사내 안전속도 준수 2. 보호구 착용								
TBM 사진	사진 1		사진2						
									
회의내용 및 기타사항	1. 작업 장소 확인 및 작업량 확인 2. 위험요소 인지								
TBM 회의 구성원 현황 정보									
NO	소속	이름	서명	건강상태			보호구 착용		
1	경영지원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음주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량
3	지게차 기사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발열	<input type="checkbox"/> 음주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Ⅰ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중복 발생 사업장, 서울시 우선 지원 추진 필요

중복 발생 인지율이 낮고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에 정부 및 서울시 사업 우선 지원 방안 마련

- 서울시 민간 사업장 중 ‘중대시민·산업재해’ 중복 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중복 발생확률이 높은 업종을 분류하고 재해 유형을 파악
- 중복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중복 발생에 대한 인지, 사고유형 등을 안내 및 홍보하고, 컨설팅 등 서울시 지원 대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향후 담당부서에서 지원 접수 및 선정 시 중복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리스트를 참고하여 우선 선정을 통해 재해 예방 효과 극대화 필요
 - 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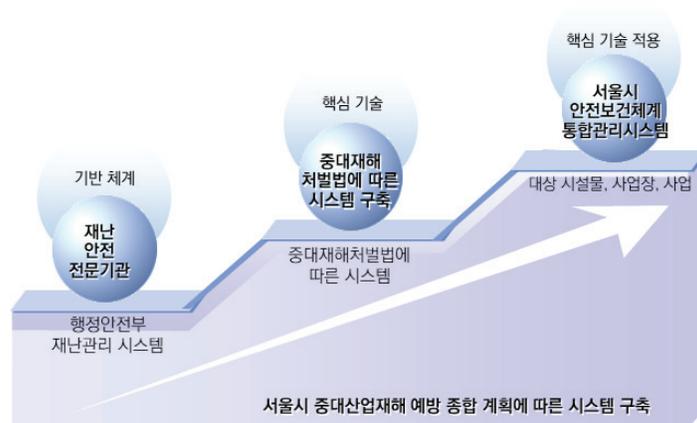
[표 9] 업종별 시민·산업재해 중복발생 가능한 재해 종류

구분		발생 가능한 중복발생 재해 종류·빈도	
업종	서울시 소재 사업장 비율	1순위	2순위
도매 및 소매업	27.5%	화재폭발	시설물 재난사고
숙박 및 음식점업	11.8%	화재폭발	전기, 가스 사고
운수 및 창고업	10.0%	도로교통 재난사고	화재폭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9%	시설물 재난사고	추가(낙상)
제조업	6.4%	승강기 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건설업	5.7%	시설물 재난사고	추락(낙상)
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2.5%	승강기 사고	시설물 재난사고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市 중대재해 통합시스템 활용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관리 추진

-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으로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
 - 서울시에는 중대재해 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및 의무 이행 여부 점검/관리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2022년 1단계 ‘중대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현재 추가기능 및 고도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진행 중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2024)

[그림 10]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목적

- ‘서울시 직발주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은 ‘서울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계획’과 ‘의무이행 현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
 - 수급 사업장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서울시의 고도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담당 부서는 사업장의 모든 안전보건 활동을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 수행 평가’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종료 시점에 평가를 시행. 결과는 ‘서울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 후 차기 용역 사업 PQ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 구축 제안
 - 우량 사업자 선별이 가능하며, 수급 사업자에게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동 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I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 강화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연계, 경영 리스크 선제적 관리

- 서울시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총 1,180,025곳 중 약 1%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대부분 구축된 상태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연계한다면 안전사고, 재난으로 인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법적 리스크를 감소하여 지속적인 경영 활동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ISO 45001은 조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을 관리하는 예방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

[표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방안 [리더십 파트 예]

구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4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 영4조1호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영4조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영4조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이행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표 11]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방안 [리더십 파트 예]

구분	기업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3.4 리더십	3.4.1 최고관리자의 책무 3.4.2 정책 3.4.3 최고관리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3.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 영4조1호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영4조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영4조2호 안전보건 총괄 관리전담 조직 설치

-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기업재난관리표준(행안부)과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안전사고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 유지 가능

Ⅰ 차별화된 체계적 지원 방안 요약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재해발생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표 12] 차별화된 지원방안

구분		지원내용	비고
10인 미만		현재 지원 중인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 간편 공통 매뉴얼 제공 - 온라인 구독 서비스 우선 제공 - 정부, 서울시 지원사업 우선 제공	지원 '大'
50인 미만	일반	현재 지원 중인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 간편 공통 매뉴얼 제공	지원 '中'
	시민+산업재해 중복 발생	현재 지원 중인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 중복 발생 가능성 인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정보 제공 (중복 발생 가능성, 사고유형 등) - 간편 공통 매뉴얼 제공 - 온라인 구독 서비스 우선 제공 - 정부, 서울시 지원사업 우선 제공	지원 '大'
	市 직발주 도급·용역·위탁	현재 지원 중인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 간편 공통 매뉴얼 제공 - 온라인 구독 서비스 우선 제공 - 서울시 중대재해예방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 용역 종료 시 평가 후 결과 반영	지원 '大' + 관리강화
50인 이상		현재 지원 중인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온·오프라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연계 가이드 제공 - 기업재난관리표준(재해경감관리체계) 연계 가이드 제공	지원 '小'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